

# 挺身隊「배상 國際訴 포기」

對日 청구권협정 再 체결 추진 않기로

## 민간단체와 마찰일듯

정부는 정신대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법 학자들과 민간단체들이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시킨 65년 체결된 「일본청구권협정」을 무효화하고 「정신대원 해방」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불응하고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치 않기로 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국제법 학자들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민간단체들은 정신대 문제가 65년 「일본청구권협정」을 무효화하고 있기 때문에 관습에 소용을 제기할 때 논의되지 않던 중립한

사안으로 새로 드러났기 때문에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추론하더라도 일본과 청구권 협정을 맺을 수 있다.

### 네덜란드 위안부 관련 일정부 보상 불응방침

【도쿄=김효순 특파원】 일본 정부는 네덜란드 여성이 위안부로 강제동원된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사죄는 다시 하더라도 보상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한편 일본 법무성은 이날 네덜란드 여성을 위안부로 동원한 사실의 전법재판 결과가 법무성 자료에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안부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들어갔다.

## 日軍 和여성도 위안부 동원

【東京=李相湖 특파원】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 여성을 중공위안부로 강제동원한 사실이 밝혀졌

7/3

印尼서 미성년자 등 百여명 동행 賣春 강요  
관련 日장교 12명 終戰직후 和법정서 재판

다고 한다. 44년 2월 중공위안부원정대에 의해 보충하겠다고 위협, 체포된 약 1백여명의 네덜란드 여성을 위안부로 동원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령 동인도였다.

이들 여성은 처음 일본군 위안부로 「신체적 노예」로 사용된 것이란 고백을 했으며 「중공위안부」에 「미성년자」로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